

언론계의 시각

남찬순 / 동아일보 논설위원

김대중 정부의 대북한 정책은 김영삼 정부보다 훨씬 유연성을 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지금까지 북한은 자신들의 핵문제를 성공적으로 부각시켜 미국과는 상당한 관계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접촉을 회피하는 정책으로 일관,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김영삼 정부도 북한의 이러한 태도를 전환시킬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남북 관계는 교착 상태로 일관했다. 김대중 차기 대통령은 대북 정책에 관한 한 분명한 소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북 관계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북한 관계는 상대적이다. 김대중 차기 대통령이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대북한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또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는 올해의 국내 사정과 북한의 반응을 더 주목해 봐야 알 수 있다.

지금 남북한은 모두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작년 10월 김정일체제를 공식 출

범시킨 북한은 본격적인 체제 공고화 작업에 들어갈 것이다. 과거처럼 체제 공고화 작업의 수단으로 대남 공세 강화 정책을 택할 수도 있다. 김정일의 주석직 취임도 올해 안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 들어가 있는 남한은 경제 회생에 전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처지다. 남북한의 새로운 정권, 남한의 IMF체제 등장은 올해의 남북한 관계를 특징지을 것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가 상호 작용을 통해 남북한 관계의 기본 틀을 형성할 것이며 김대중 정부의 대북한 정책도 이 기본 틀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김대중 후보의 대통령 당선 이후 최근까지 - 비록 2 개월도 안됐지만 - 이러한 환경 변화가 상호 작용하는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남북 관계의 방향과 이에 따른 신정부의 대북한 과제를 설정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다.

먼저, 올해의 대남 정책 기조를 보자. 북한이 지난 1월 1일 오전 8시 중앙방송을 통

해 발표한 '당보·군보 공동
사설'은 "남조선에 단순히
정권이 교체되고 대통령이나
바뀌어서는 변화될 것이 아
무것도 없다"며 연북 화해

정책, 콘크리트 장벽 제거, 국가보안법 철폐,
안기부 해체 등 남한측의 정책 전환을 촉구
했다. 그러면서 종래의 조국통일 3대현상(자
주·평화 통일·민족 대단결 3대 원칙, 고려
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년사격인 이 공동 사설에서는
과거와 다른, 대남 정책의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은 이 신년 사설에서도 김대
중 차기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는 유
보한 채 과거 식민지 파쇼 정권의 단순한 정
권 교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을 뿐이
다. 지난 14대 대선 당시 김영삼 대통령 당선
자에 대해 "6공의 연장이고 남조선 인민들의
염원에 배치된다"는 투로 보도했던 것과 비
교된다. 실제도 북한 외교부 김계관 부부장은
최근 평양을 방문한 칼 레민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에게 김대중 차기 대통령의 대북 정
책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
다(「동아일보」(1998. 1.20)). 반면, 북한은
김영삼 정부에 대해서는 '문민의 탈을 쓴 가

대남 정책의 기초는 전혀 바꾸지 않으면서
김대중 차기 대통령에 대해 비난을 삼가고 있는 북한의
속셈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북한이 김대중 차기 대통령에
대한 공격의 시간을 벌고 있다는 분석이 다수다.

중스런 통일의 적' (「로동신문」(1998. 1.11))
이라고 종전과 다름없는 비난 공세를 펴고
있다.

대남 정책의 기초는 전혀 바꾸지 않으면
서 김대중 차기 대통령에 대해 비난을 삼가
고 있는 북한의 속셈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서는 북한이 김대중 차기 대통령에 대한 공
격의 시간을 벌고 있다는 분석이 다수다. 아
직 김대중 차기 대통령을 공격할 만한 여건
이 조성 안됐다고 판단하거나 공격의 논리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분석이 신빙성 있
다. 시간적으로 어정쩡한 시기라는 것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곧 의도적으로
남북한 관계를 긴장으로 몰아가면서 김대중
차기 대통령의 태도를 시험하려 할 가능성이
짙다. 그래야 김대중 차기 대통령에 대한 공
격의 빌미를 쉽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남
한에 새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북한측의 부
정적인 시각이 근본적으로 완화될 조짐은 없
으며 남북 대화에 긍정적으로 나올 평양 당
국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도 힘들다. 새정
부는 이러한 북한의 속셈을 전제해가며 직접

최근 발언록을 보면 김대중 차기 대통령의 대북 관련 입장에는 조금씩 변화가 있다. 우선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언급이 없어졌고 남북 대화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 강조되고 있다.

한 대북 정책을 구사해나가야 한다. 김영삼 정부 초기처럼 북한 정권의 꺾모습이나 남북 관계에 대한 환상때문에 현실과 거리가 먼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잘못을 다시는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

사실 김대중 차기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8일 대선 이후 밝힌 대북 정책 원칙도 어떤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당선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는 남북한의 직접 대화와 지난 1992년 12월 남북한이 합의한 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촉구했다. 통일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이 이뤄진 그 이후 점진적으로 실현할 문제라고 말했다. 좀 더 구체적인 제안으로는 남북기본합의서 실천을 위한 특사 교환과 김정일 총비서와의 정상회담이 들어있었다.

이어 지난 1월 4일 미국 시사주간 「뉴스 위크」지와 가진 회견에서 김대중 차기 대통령은, 궁극적인 목표는 남북한 대화의 재개라며 “현재로서는 통일이 첫번째 목표가 아니다.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상호 이해와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의 교류 및 경제적 교류

가 더 필요하다. 이를 통한 신뢰 구축 이후에 통일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중 차기 대통령이 1월 12

일 칸드쉬·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만났을 때는 “지금은 경제 살리기와 행정 개혁, 국제 신인도 제고 등의 문제로 남북 문제를 크게 벌어나갈 여력이 없다”면서 “남북 대화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북한과 정경 분리 원칙에서 경제 교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발언록을 보면 김대중 차기 대통령의 대북 관련 입장에는 조금씩 변화가 있다. 우선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언급이 없어졌고 남북 대화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김대중 차기 대통령의 생각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나타났다. 남북정상회담 추진이 100대 국정 과제에서 제외되었고, 남북 경제 협력과 대북 농업 지원, 관광 교류 등이 경협이라는 과제로 포괄되었다. 또 4者회담도 4者회담 그 자체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남북 대화의 하나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김대중 차기 대통령이 지금 머리 속에 그리고 있는 대북 정책의 기초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통일지상주의에 이끌려 조급한 정책은 취하지 않겠

다는 뜻이 분명하다. 김대중 차기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의 한반도 주변 권력 관계를 하루아침에 뒤바꿀

수도 있는 구조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며 그 틀 안에서 점진적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하나는 남북한 관계를 더욱 현실적인 시각에서 접근해나가겠다는 생각을 보이고 있다. 이 현실적인 시각을 강조하고 있는 배경에는 무엇보다 우리의 경제 사정에 대한 고려가 깔려있다. 지금까지의 남북 관계를 보면 경제에서 말하는 거품이 상당히 있었던 게 사실이다. 우리의 월등한 경제력이 그같은 거품을 만든 주 원인이었다. 이 거품은 북한에 대한 투자나 경제 지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정치·외교적인 관계에도 거품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거품은 실재나 현상을 왜곡시키고 현실과 거리가 먼 판단을 내리게 할 가능성이 많다. 과거에는 체제 경쟁이나 과시를 위해 또는 정치적 선전을 위해 누가 보아도 실현 불가능한 대북 정책을 내놓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물론, 북한은 지금도 그러한 류의 정책을 대남 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지만, 이제는 거기에 맞대응하듯이 하는 자세는 버리겠다는 의미다.

김대중 차기 대통령이 그리고 있는 대북 정책의 기조는 첫째, 통일 지상주의에 이끌려 조급한 정책은 취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둘째, 남북한 관계를 더욱 현실적인 시각에서 접근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지금 김대중 차기 대통령의 최대 목표는 하루빨리 IMF체제를 졸업하는 일이다. 대북 정책도 중요하지만 경제 위기 극복이 우선이다. 대북 정책은 자연히 경제 위기 극복 정책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김대중 차기 대통령의 발언은 이미 경제 위기로 인한 대북 정책의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상당히 시사하고 있다. 북한이 이러한 김대중 차기 대통령의 입장을 역이용하며 공격의 도를 높일 가능성은 많다. 북한이 2월 중순으로 예정됐던 4총회담 특별소위원회 개최 연기를 주장한 것도, 여러 가지 전략적인 뜻이 있겠지만 우선 김대중 차기 대통령의 의중을 타진하는 등 '공격 수순'을 밟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남한의 경제 위기를 최대한 이용하려 할 북한은 경제 위기때문에 정신이 없는 남한의 대북 정책을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반통일 정책으로 집중 공격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공세에 일일이 맞대응하려 한다면 오히려 그들의 전략에 말려 들어가는 셈이 된다. 김대중 차기 대통령의 현실적이고도 점진적인 대북 자세는 어떤 경우든 견지되어야 한다. 4총회담부터 보자. 북

북한이 주한 미군 철수와 북미평화협정 체결 주장을 철회하지 않는 한, 4者회담 자체에 연연해서는 안된다. 또 대북 정책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은 경협, 식량 지원 등이다.

겪게 될 가능성이 큰 부문은 경협이다. 남북한 교역에도 당장 IMF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국내에서 외환 위기가

한이 주한 미군 철수와 북미평화협정 체결 주장을 철회하지 않는 한, 이 회담 자체에 연연해서는 안된다. 새 정부는 4者회담이 남북 대화와는 무관한 방향으로 계속 나가면 구태여 그 회담을 유지하기 위해 국력을 소모할 필요는 없다. 물론, 4者회담은 한국 혼자서 그 방향을 전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회담이 아니다. 특히, 미국의 입장이 강하게 작용해 왔다. 정책 당국자들은 4者회담에 대한 한미간 입장 차이는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한반도 사태를 세계 전략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미국의 입장이 우리와 항상 같을 수는 없다. 김대중 차기 대통령이 4者회담과 관련해 미국과의 입장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관심거리다. 그렇게 되면 미국측이 김영삼 정부보다는 더 강하게 새정부의 등을 밀 가능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4者회담을 둘러싼 한미간 갈등이 커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의 압력이 있다 해서 4者회담에 끌려다니는 형국이 된다면 결국은 북한과 미국의 대화에 들러리나 서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습이 된다.

새정부가 대북 정책과 관련해 어려움을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남북한 교역 규모는 총 1,276만 3,000 달러로 1996년 같은 기간 1,992만 2,000 달러에 비해 무려 35.9%가 감소했다.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에도 문제가 생겼다. 세계식량계획(WFP)은 올해 대북 식량 지원을 3억 7,800만 달러로 잡고 있다. 이는 약 65만 8,000 톤 규모로 1997년도의 33만 3,000 톤보다 두 배 가량 늘어난 분량이다.

지난해 한국의 부담액은 2,600만 달러로 WFP의 증가 수준에 맞추자면 금년도 부담액은 4,000만~5,000만 달러는 되어야 한다. 지금의 환율을 기준으로 할 때 거의 1,000억 원에 달하는 기금을 마련해야 할 형편이다. 이같은 상황때문에 정부 관계자들은 올해도 대북 식량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면서도 그 규모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경제적으로 월등하게 우월한 위치에 있는 남한이 지금 북한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바로 경제적 지원이다. 남한의 대북 경제 지원은 남북한 관계의 실질적인 지렛대 역할을 하는 셈이다. 대북 지원이 떨어지면

당연히 북한에 대한 영향력도 지금보다는 감소하기 마련이다. 북한은 이같은 남한의 경제력 유입에 대해 적지 않은 고민을 해왔다. 내부적

으로는 남한의 경제력을 이용하려는 충동을 버리지 못하면서도 남한 자본이 자신들의 폐쇄 사회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 경제력이 약화되어 있는 지금을 남한 경제력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호기로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 북한은 미국과 일본의 경제 지원을 더욱 선호할 것이고 남한에 대해서는 封南 정책을 강화할 것이다.

그같은 북한의 정책 변화를 이용하려면 김대중 차기 대통령이 이미 밝히고 있듯이, 무엇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 정책만 냉철하게 골라서 효과있게 실천해나가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북한과의 교류의 폭은 가능한 한 넓혀나가는 것이 당연하다. 북한이 교류의 폭을 좁히려 해도 새정부의 정책은 반대로 그 폭을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우리의 경제적 위기를 고려해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과거와 같은 명분용 정책은 과감히 수정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북 정책은 강화해야 한다.

북한이 아무리 우리의 경제 위기를 이용하려 해도 이미 끝난 체제 경쟁의 승패는 바

새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나가면서도 남북 관계에서의 우위를 확고히 지키는 대북 정책은 조금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실과 주변 상황 그리고 평양 정권의 속셈을 면밀히 관찰하며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대북 정책 수립 과정의 구조 조정 역시 필요하다.

뀔리 없다. 남북 관계에서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우위는 변화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 위기가 그같은 우위를 크게 훼손시킬 가능성은 있다. 따라서 새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나가면서도 남북 관계에서의 우위를 확고히 지키는 대북 정책은 조금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실과 주변 상황 그리고 평양 정권의 속셈을 면밀히 관찰하며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대북 정책 수립 과정의 구조 조정 역시 필요하다. **統**